

‘장미 대선’ 레이스 돌입... 정권 교체냐, 재창출이냐

민주 이재명, 대선일 확정시 이르면 9일 대표직 사퇴 김두관 등 비명계도 채비... 경선 선관위 출범 예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최장 60일의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지속돼 온 불확실성이 제거됨에 따라 차기 대권을 놓고 양보 없는 승부가 펼쳐질 전망이다.

주말 동안 잠시 숨을 고른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인 국민의힘은 여기에 맞춰 대선 경선 준비에 들어간다.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퇴 시한인 5월 4일 전에는 경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만큼 숨 가쁜 경선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기대선 시간표가 촉박한 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대선 후보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은 조만간 구체적인 경선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조기 대선의 승부처로 중도층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여 양당의 ‘중도 선점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이 정해지면 대표직을 내려놓고 본

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한다.

대통령 권위에 따른 대선 일정은 국무회의 의결로 정해진다.

총리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대선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또는 하루 뒤 이 대표가 사퇴할 것이라 전망이 있었지만, 당내 논의 결과 대선 일정이 확정된 후로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경선을 관리한다.

이 대표는 당내에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혔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경선 기간에도 본선용 중도 확장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마 메시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민생과 외교 정책을 앞세워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띄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대표에 맞설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속속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중 김두관 전 의원은 7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당내에서 나오는 첫 출마 선언이다.

나머지 주자들은 출마 여부를 막판 고심 중인 가운데 이번 주 안에 대선 출마 입장을

을 밝힐 예정이다.

옛 친문(친문재인)계 지원을 받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출마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김동연 경기지사도 조만간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경우 아직 출마 여부를 놓고 고민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에서 유일하게 부산에서 당선된 전재수 의원은 경선 도전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다른 비명계 주요 정치인들은 아직 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당내에선 비명계 주자들이 이 대표의 독주 체제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가 관심이 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 풀려난 데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이재명 대세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는 관측 속에 비명계의 활동 공간은 한층 좁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진보 세력 오피스 프라임리더 주장과 맞물려 비명계 주자들의 연대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민주당은 촉박한 조기 대선 일정 탓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인어서 오피스 프라임리더의 현실화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는 시간표 아래 이번 주 경선 선관위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선관위는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선관위원장에 중립적 이미지를 가진 4선 중진 위원이 내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관위원장은 윤후덕·남인순·민홍익·이춘석·한정애·진선미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파면 충격’ 국민의힘, 잠룡들 몸풀기 시작

김문수·홍준표·한동훈·오세훈 등 출사표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돌입한다. 탄핵 충격으로 주말 동안 ‘자숙 기간’을 가졌지만, 최장 60일의 대선 레이스에 서둘러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응 방안과 당 운영 방향,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으로 충격 받은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적할 대선 주자를 찾아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중도·보수층 거부 정서를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열린 의총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한 윤석열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며 ‘반(反) 이재명’ 기치를 내세웠다.

전국의 당 현수막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부터 ‘국민께 죄송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교체됐다.

경선 로드맵 제시에 발맞춰 주요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를 전망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출마를 촉구하며 자택 인근을 찾아온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다만 이 자리에서 “계획한 건 없다”며 국민의힘 입당 계획에 대해서도 “바사하겠다”고만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주 시장직을 사퇴하면서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한다. 한동훈 전 대표도 경선 일정 운곽이 나오는 대로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역시 이번 주 출마 선언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 나경원 의원 등 이번 탄핵 영국에서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를 높

인 중진 의원들도 출사표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출마를 결심한 주자들 사이에는 치열한 경쟁이 예고돼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독보적인 1위를 달리는 사이, 보수 진영에서는 이렇다 할 ‘원톱’이 없는 상태다.

지난 4일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1~3일,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보수 진영 후보들은 모두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다.

당 지지율에서는 김 장관이 24%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의견 유보’ 응답자가 43%에 이르는 등 향후 변수가 크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주자들은 경선 과정에서 저마다 중도 확장성과 이 대표를 상대할 경쟁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친단파’(탄핵 찬성파) 대 ‘반단파’(탄핵 반대파)로 나뉘어 윤 전 대통령 파면의 책임론을 놓고 선명성 경쟁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혁신, 야권 통합경선 촉구... 이재명 응답 미지수

“민주당 만의 답장 안에 대선후보 가두지 말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의 막이 오르자 조국혁신당이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다시 제안했다.

앞서 혁신당은 지난달 4일 통합 경선을 제안했으나 윤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되면서 관련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혁신당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다시 오픈프라이머리 논의의 재점화에 나선 양상이지만, 열쇠를 쥔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이같은 제안에 거리를 두는 듯

한 모습이어서 통합 경선이 현실화할지 미지수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 오픈프라이머리를 다시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민주당만의 답장 안에 가두지 말라”고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대선기획단장을 맡은 황현선 사무총장은 통합 경선을 하기에는 조기 대선 일정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민주당 경선 일정

에 맞추면 된다. 일정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설명했다.

역선택 우려에 대해서도 “역선택 방지 장치를 두고, 플랫폼도 민주당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당은 지난 2일 재·보궐 선거 때 민주당 텃밭인 전남 담양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담양군수를 배출했다는 점을 지렛대로 삼는 분위기다. 혁신당은 담양 재선거 결과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에 대한 호남의 견제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이번 제안을 민주당이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